
「2021-제9호(Vol. 17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10. 5.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1년 3분기)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 2022년 나라살림 특집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소멸과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 대응에 중점 투자 • 2022년 나라살림 특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사회에 주목받는 농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4. 정책 및 연구 (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 어촌 활성화의 기회, 어촌뉴딜300사업과 강원도의 과제 • 주요국 대형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져온 전세계 파장 •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1~2차 추경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모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경제

출처

■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2021년 3분기)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최근 경제는 수출 회복이 지속 중인 가운데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내수 부문 충격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수요부문별 동향은 7월 이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① 소비 침체 국면 진입, ② ICT 투자 부진 속에 설비투자 확대, ③ 건설 경기 양극화, ④ 수출 호황 지속, ⑤ 기저효과에 의한 고용 개선, ⑥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의 모습을 보이며, 산업별 경기 동향은 광공업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주 급감에 따른 건설업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서비스업 경기 하강 가능성이 우려됨.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②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③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등의 현실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3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지난 2분기보다 악화된 상태로, 4분기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예상 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경제주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① 민간과 정책 당국의 경기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 방지 ② 워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 본격화 필요 ③ 소비 심리의 악화 방지와 기업 투자 심리 개선 강화에 주력 ④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마련 및 신흥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 요구 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해야 함.

[▶바로가기](#)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2022년 국내경제는 실질GDP 3.0%, 명목GDP 4.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와 소득 및 고용여건 개선으로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수출은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과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5년간(2021~2025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전 5년간(2016~2020년, 2.6%) 대비 0.3%p 하락하는 것이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비해서는 완화되는 것임.
-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등 완만한 고용회복과 함께 견실한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음. 구체적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0.1%p에서 0.1%p 증가로 전환하고, 자본의 성장기여도 또한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전 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면서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예산 집행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2013년 154.4조원에서 2021년 259.4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균형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임. 재정분권은 나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음.
- 그간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단계('19~'20)를 이행하였으며, 최근 2022년까지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27.4%까지 높이는 2단계('21~'22)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현황',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등 총 3부로 구성, 재정분권 이행경과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의 최근 정보를 담고 있음.

[바로가기](#)

■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① 지자체의 허술한 세금관리로 나타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도입, ②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③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계산 ④ 재정통계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단위 개편 등임.
- 이들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향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 향후 정책과제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① 정부부문의 각종 거래들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 ②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산출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우리나라에 고유한 재정위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거래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교차분류하고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임.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2년 나라살림 특집(1)-어촌 소멸과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 대응에 중점 투자

한국개발연구원

- 우리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가속화 속에서 플라스틱 해양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조 3,365억원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2조 8,005억원으로 44%, 해운·항만 부문이 2조 74억원으로 32%, 해양·환경 부문이 1조 2,834억원으로 20%를 차지함.
- 해수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① 연안·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촌소멸 대응, 연안경제 활성화) ② 공공 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 본격 추진(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③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등임.

[바로가기](#)

■ 2022년 나라살림 특집(2)-비대면 사회에 주목받는 농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한국개발연구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농업·농촌 분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됨.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공간이 주목받는 한편, 무역제한으로 국가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먹거리 생산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규모적인 측면에서 2022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2021년 대비 3,911억원(2.4%)이 증가함.
- 농식품부는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1.9.7. 제정·시행)

법제처

-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9.29. 개정/10.8. 시행)

법제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보상 등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및 신청 절차와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 및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9.28.)

행정안전부

-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28.(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통과, 2023년 시행 예정, 개인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음.
 -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
- 주요 내용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투명한 관리·감독 등을 통한 부작용 방지 등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9월 2일 정부는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현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로, 기본세율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475원/L, 340원/L, 탄력세율은 2019년 9월 1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529원/L, 375원/L이 적용되고 있고, 면세(免稅)제도는 운영하고 있으나 비과세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액은 13.9조 원이며, 최근 탄력세율 인하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일몰연장의 연혁과 쟁점)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2009년 이후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나가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 논의의 필요성임.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으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바로가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서론)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시작됨.
- (현황)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1인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조사 결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 초기이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개선과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①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②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해당 고충민원의 해당 민원의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③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온라인 대응성 제고 ④ 납세자보호관의 충분한 직무교육 부여 및 납세자보호자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임.
- (결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4.1. 법률 제19호) 제정을 중심으로
- (입법 배경) 1960년대 후반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농어촌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심각한 과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과소지역의 발전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게 됨.
- (제정 경위) 국가 차원에서 과소대책 필요성을 인식해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을 주기로 5차례 걸친 과소지역 대책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짐. 최근 구법의 만료(2021.3.31)와 함께 종합적·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제정함.
-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한 조치임. 과소지역 선정 시·정·촌 기준은 크게 인구요건과 재정력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도모를 위해 도·도·부·현의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방침」 책정을 규정하도록 함.
- (시사점) 일본에서 과소지역 선정의 큰 방향성은 ‘인구감소단체의 평균인구감소율 이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이 약한 시·정·촌을 지정’하는데 있음. 반면에 우리의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 기준값은 인구증감률(-5%), 고령인구비율(20%), 생산인구비율(30%) 등으로 근거를 객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본과 같이 기준값으로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정책 지역 선정 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음.

[바로가기](#)

■ 어촌 활성화의 기회, 어촌뉴딜300사업과 강원도의 과제

강원연구원

- (개요) 어업인 감소, 고령화, 정주여건 열악 등으로 어촌의 침체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나 동시에 어촌 활성화의 기회도 열리고 있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 어촌 등은 레저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촌체험마을 방문객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침체를 극복하고 기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비 같은 사업임.
- (연계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에 걸쳐 300개(개소당 평균 100억 원)를 선정하는 총 3조원 규모(국비 70%)의 사업으로, 국가어항에 비해 소외되어왔던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항포구 등과 그 배후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소형 SOC사업임. 2018년 70개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120개, 2020년 60개를 선정했고, 2021년까지 총 300개를 선정할 계획임.
- (추진현황과 과제) 강원도는 2018년 2개, 2019년 6개(내륙어촌재생 1개 포함), 2020년 4개소로 현재까지 12개 어촌이 선정되었고, 총예산은 1,159억원, 이 중 지방비는 352억원이 투입됨. 향후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을 제외하면 전체 어촌의 20% 이상이 동 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촌 활성화 장기 비전 및 계획 마련 등 보다 촘촘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 (추진방안) 강원도는 무엇보다 해수부의 지원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체계(가칭 강원해양수산산업연구원) 구축이 시급함. 인구감소를 대비한 어촌의 거점화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어촌의 자립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추진, 어촌과 지역사회, 지역 기업 등과의 연대를 통한 제품화 경쟁력 강화,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향토기업의 육성과 파급 극대화 등의 추진으로 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주요국 대형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형은행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단계적인 축소계획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에 의해서도 강도 높은 요구가 표출되고 있음.
- 기관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한 탄소 배출량 축소 압력은 진앙지인 유럽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형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영국의 ShareAction의 조사에서 바클레이즈(Barclays)가 유일하게 중간단계 조치로서 2030년까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에 있어 탄소 배출량 현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바클레이즈 역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음.
- 향후 주요국 대형은행들은 금융당국 및 기관투자자들의 친환경 경제성장 중시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량 축소 유도를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명시적인 기준 및 실행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공시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져온 전세계 파장

- 금년 들어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이어 통신·운송·식품·건설·목재·숙박·가전·가구 등 다방면에 걸쳐 공급망 차질이 진행 중이며, 전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은 나타내는 신호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음.
- 이는 팬데믹 장기화가 주원인이며 이로 인한 파생문제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① 재고 부족 ② 인력 부족 ③ 운송 차질 ④ 정책 및 기후재난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차질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전세계 물동량이 가장 많은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져올 파장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델타변이 확산이 향후 진정될 경우 세계경제가 재차 회복세를 모색하겠지만 어그러진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상흔이 쉽게 아물지 않고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또 다른 리스크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국제금융센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가진 불공정성과 시장왜곡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선진국 그룹 내에 형성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전선이 각 분야에서 구축되고 있음.
- 중국은 체제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비판과 압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선진국의 견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로부터 차단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국내대순환 전략’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함. 그 목표는 해외의 첨단기술과 자본 등 외부 혁신 동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내부에서 산업고도화 및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동시에 중국은 기업, 산업, 통상 정책 등 분야에서 선진국의 비판이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대외개방의 기초를 지속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중국견제가 본격화되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며, 그 결과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서 중국 산업의 추격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큼. 반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초기 시장을 육성하면서 선진국과 상호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전망이다.
-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의 중국견제가 주는 기회를 활용하여 기존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중국과 선진국 시장 모두를 활용해야 함.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10.1.(금)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군 장병 ICT 정예 요원화 ▲'22년 협업예산 편성 주요내용과 사례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방안 ▲기후대응기금 기본구조 및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정부는 20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AI·SW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20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ICT 정예요원을 양성하여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군 장병 전역 후 ICT분야 취·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재정혁신 과제인 2022년 협업예산은 과제 수를 확대(12→17개)하고,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40% 이상 증액(9.9→13.9조원)하는 등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미래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4대 분야 20개 신기술 영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전년대비 36% 증액한 1.6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약 16만명의 신기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가져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정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바로가기](#)

■ 1~2차 추경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9.29.(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21년 1~2차 추경의 집행실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4/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올해 1·2차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 당초 계획한 집행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코로나 4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역관련 사업(12.7조원)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7조원)가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 향후 남은 4/4분기 중 재정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부처별로올해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을 달성해 줄 것을 당부함.

[바로가기](#)

■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9.17.(금)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는 아동수당 수혜자와 아동복지정책 실무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자 3명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의로 이루어졌음.
* 세가지 분야: ①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 및 과제, ②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성과 및 과제
- 한편, 정부는 '18.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19.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이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개하는 '18년~'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하였음.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내용은 ①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② 교육에 투자된 재정 ③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등임.
-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9월 OECD 누리집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21」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임.

[바로가기](#)

■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9.30.(목)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년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③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과,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④ 능력개발 지원 및 ⑤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산업의 활로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여건을 진단하며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16.(목)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①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②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③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등과 같은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한편,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함.
- 아울러,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함.

[바로가기](#)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상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을 구성하고, 9.30.(목)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는 ‘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인해 SNS·공연·행사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와 상품 판매, 정치,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포럼은 메타버스의 도래에 따른 우리의 일상과 경제·사회적인 변화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문화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에 메타버스상에서 이용자들이 창작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거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보호, 과세 등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럼 및 연말에 종합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아울러, 내년에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바로가기](#)